

2021 상반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페이지
2021.01.11.	볼리비아 아르세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승호	01
2021.01.14.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오태현 외	02
2021.01.19.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03
2021.01.27.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오윤미 외	04
2021.02.04.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양평섭 외	05
2021.02.05.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정재완 외	06
2021.02.05.	중국의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박진희	07
2021.02.10.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장영욱 외	08
2021.02.18.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이승호	09
2021.03.03.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최장호 외	10
2021.03.05.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정재완 외	11
2021.03.08.	인도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외교 동향과 시사점	노윤재 외	12
2021.03.10.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이규엽 외	13
2021.03.1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이권형 외	14
2021.03.16.	브라질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의 주요 내용과 평가	홍성우	15
2021.03.18.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강문수 외	16
2021.03.23.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장영욱 외	17
2021.03.30.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문지영 외	18
2021.04.06.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송지혜	19
2021.04.08.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연원호	20
2021.04.12.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박혜리	21
2021.04.13.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이규엽 외	22
2021.04.14.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혁 외	23
2021.04.14.	OPEC+의 단계적 증산 결정 배경 및 시사점	유광호	24
2021.04.15.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주관 외	25
2021.04.19.	중국 화남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정지현	26
2021.04.2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정형곤	27
2021.04.2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	최인아 외	28
2021.04.23.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29
2021.04.28.	중국 동북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지원	30
2021.04.29.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보급 현황과 시사점	민지영	31
2021.04.3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 USTR 보고서를 중심으로	나수엽 외	32
2021.05.04.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오태현 외	33
2021.05.04.	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원석	34
2021.05.04.	중국 서부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재희	35
2021.05.07.	기후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문진영 외	36
2021.05.1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안성배 외	37
2021.05.14.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노윤재 외	38
2021.05.17.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박정호 외	39
2021.05.20.	중국 중부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박진희	40
2021.05.2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입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	김초롱	41
2021.05.24.	중국 환발해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김주혜	42
2021.05.25.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태현	43
2021.05.27.	칠레 제헌의회 선거결과와 전망	홍성우	44
2021.05.28.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윤여준 외	45
2021.05.31.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추진동향	금혜윤 외	46
2021.06.04.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문진영 외	47
2021.06.08.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규엽 외	48
2021.06.16.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환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한형민 외	49
2021.06.17.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곽성일	50
2021.06.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애림	51
2021.06.22.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송지혜	52
2021.06.23.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영선	53
2021.06.23.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장영욱 외	54
2021.06.24.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최장호 외	55
2021.06.28.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김규판	56
2021.06.29.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전략과 한국과의 신탁력 과제	정동연	57
2021.06.30.	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이승호	58



볼리비아 아르세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승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eungholee@kiep.go.kr, Tel: 044-414-1211)

◎ 2020년 11월 8일 민주사회주의 노선의 좌파 정당인 Movimiento al Socialismo(MAS)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가 볼리비아의 제6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 아르세 신정부는 △ 선거의 공정성 △ 높은 투표율 △ 과반 득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볼리비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이번 대선에 앞서 2019년 10월 실시된 지난 대선에서는 2006년부터 집권해온 MAS 소속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당선되었으나 개표조작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이후 들어선 임시정부에서 사회 불안이 가중된 바 있음.

◎ 아르세 신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아르세 신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 퇴진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 불안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GDP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1차 상품 붐 소멸로 인한 경상·재정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모랄레스 정부와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략산업]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에 차질을 겪고 있는 리튬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예상되며,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생산 역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아르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모랄레스를 완전히 배제한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입법부 내 여야 관계 개선과 사법부의 탈정치화 역시 여전히 불투명해 보임.
- [외교] 중남미 주요국 중 멕시코, 아르헨티나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좌파정권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서반구의 전통적 패권국인 미국보다는 역내 영향력을 급속도로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선거 결과는 MAS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용과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보였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볼리비아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 차상위층 △ 원주민 △ 농업·광업 부문 노동자에서 MAS에 대한 지지가 견재함을 시사함.

◎ 2000년대 중남미의 분홍빛 물결(pink tide)을 이끌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 1기 좌파정권이 퇴진하고 현재 이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2기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각국 정치지형 및 역내 지정학적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양측은 평가함.
- [시장접근] 중국이 합자회사(Joint Venture)·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됨.
- [공정경쟁]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됨.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을 약속함.

◎ [평가 및 전망] EU와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남아 있고, 유럽의회, 미국 등이 협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절차에 난관이 예상됨.

- EU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는바, 이 과정에서 투자협정의 핵심 목적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함.
- 미국은 EU를 중국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왔으나,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는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함.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괄적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협정에 우려를 제기함.
- 구체적인 합의문이 공개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바, 협정문 비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29일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으며, 2021년을 ‘청년 지원 및 국민 건강 강화의 해’로 지정함.

- 이번 연두교서는 △교육 △의료 △경제 △국가운영 △인권보장 및 법치 확립 △외교·안보 순으로 구성됨.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보건·의료 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창업, 취업 등을 통해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2021년 우즈베키스탄은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 개선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경제 부문에서 경제자유화 확립 및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교육 인프라 개선 △전문가 육성 △청년 지원이며, 공공교육의 양적·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보건·의료 정책의 키워드는 △의료 체계 개선 △질병 관리 △국민 건강 증진이며, 정부는 2021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32% 증액하여,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빈곤 퇴치 및 농업 지원 △사업환경 개선 △지역균등 개발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해외투자 유치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WTO 가입 및 한국, 유럽 등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계획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으며, 경제자유화 추진 이후 외환거래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해외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둔화되었음.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조업, 의료, 교육 분야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농업, 물류·운송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 ◎ 2020년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운영 핵심 목표로 △‘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됨.
 - [쌍순환]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전략 내용을 2021년 8대 중점 업무 대부분에 포함하고 있음.
 - [수요측 관리] 2021년에는 제도 및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총수요의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측 관리’를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 간 동적 균형을 형성할 것을 강조함.
 - [개혁·혁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 금융시장 개혁 등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중국 내부의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을 명시함.
- ◎ 중국은 2021년 거시정책 운영 방향으로 연속성(连续性)·안정성(穩定性)·지속가능성(可持續性) 유지의 원칙 아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함.
 -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경제주체의 보호와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중단해나갈 예정이나, 경제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힘.
- ◎ 2021년 중국경제 운영의 8대 중점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부 불확실성 대응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 성장동력 확보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정됨.
 - [외부 리스크 대응]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주적 산업·공급 사슬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재편 및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내부 성장동력 확보] 제도개선과 세제혜택 등 ‘수요측 관리’를 통한 직간접적 내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줌.
 -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를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 중국은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 △기술혁신 성장 △녹색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내·외자 기업의 공정경쟁 지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외자 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존재함.
 -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전환은 한·중 간 기술협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축소, 경쟁 심화, 수입대체 확대 등 한국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의 녹색성장 추진은 환경 분야 협력 및 대중국 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 등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정책·조치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044-414-1121)
박영석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부연구위원 (yspark@kiep.go.kr, Tel: 044-414-1032)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 설계에 반영함.**
 - 미국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하며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은 탄소세 등 기후변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의 정확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통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추정함.
-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임.**
 -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 정책을 통해 시장의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nudge)하여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임.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역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추정에 근거해야 하며, 관련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 개발에는 10년에서 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민간 주도(private initiative)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 ◎ **[배경]** 미얀마 쿠데타의 표면적인 배경은 2020년의 총선 부정선거이나, 실질적 배경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에 있음.
 - 미얀마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 대표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방식의 ‘국가고문직’을 설립해 통치하는 가운데, 군부는 상하 양원 의석 25% 지명,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 임명, 국가 비상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장악 등의 권한을 보유함.
 -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아웅산 수찌 진영과 군부의 관계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2020년 총선에서 수찌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군부의 불안이 가중된 것이 이번 쿠데타의 직접적인 배경임.
- ◎ **[전망]** 국내적으로는 군부가 새로운 총선 준비, 사회 안정과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미얀마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존재함.
 -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을 공고화하기 위해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규명, 새로운 총선 준비, 경제 회복 및 개혁·개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시위 확산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정국을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 미국 주도의 다양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수단, 적절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재가 미얀마의 친(親)중국화를 부추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얀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서구권의 딜레마임.
- ◎ **[의미]** 이번 미얀마 사태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듯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단기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거나 미얀마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ODA와 금융거래 중단을 포함한다면,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과 현지진출 기업의 비즈니스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적인 점검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중국의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 ◎ 중국은 2021년 1월 초중순 베이징(北京) 인근에 위치한 허베이(河北)성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1월 하순부터 감염 확산이 진정되고 있음.
- ◎ 중국정부는 감염지역의 신속한 봉쇄와 대규모 핵산검사를 통해 이번 감염 확산을 저지하였는데, 이번 재확산은 이전과 달리 지역발생으로 인한 감염과 농촌지역 감염이 많고,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요구됨.
 -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랑팡(廊坊)시를 포함한 허베이성 3개 도시 전체를 봉쇄하였으며, 헤이룽장(黑龙江)·지린(吉林)성 등 주요 감염지역 역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이내에 봉쇄조치함.
 - 방역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이 방역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춘절 농민공의 귀향이 해외발 바이러스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감염 확산의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됨.
- ◎ 중국은 해외 입국자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춘절에 지역간 이동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농촌지역에는 별도의 방역 강화정책을 발표함.
 - 베이징, 광둥(广东) 등지에서는 해외 입국자에게 기존의 14일 시설격리 이후 추가적으로 7~14일 자가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주요 물류기지는 수입 냉동·냉장 식품 전용 창고를 구축해 수입 식품의 방역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춘절 기간 코로나19 중·고 위험지역 주민의 타 지역 이동을 제한하고, 타 지역 출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향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연휴를 보내도록 취업 기회, 보조금, 소비 쿠폰 및 무료 데이터 등의 혜택을 제공함.
 - 농촌지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이에 한해 귀향을 허용하는 한편, 모임 인원 수를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핵산검사·의심환자 보고·접촉자 파악 등 방역 업무가 특정 시간 내에 신속히 수행되도록 규정함.
- ◎ 중국의 이번 대응조치는 2020년과 달리 매우 적극적이며, 강제적·자율적 조치를 혼용하여 춘절 이동 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으로, 이 중 여러 혜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설 연휴를 앞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작년에는 우한 봉쇄조치가 늦게 이루어졌고, 춘절에도 ‘연휴 연장’ 정도로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여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음.
 - 최근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귀향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명절을 보낼 것이라 답해, 중국정부의 정책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 이번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춘절 기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춘절 이후 공장 조업 재개도 2020년보다 순조로울 전망이다.
 -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춘절 귀향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 방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춘절 이후 농민공의 복귀가 늦어져 각 공장의 조업 재개가 지연되었던 문제가 202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Tel: 044-414-1064)

- ◎ [접종 현황] 2021년 2월 9일 기준 영국을 시작으로 EU,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은 인구의 세 배가량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계약 또는 구매확정)하였으며, 2월 9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2%가 1차 접종을 마침.
 -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하여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8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 백신 생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계약서상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백신 수출 제한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
- ◎ [2021년 경제 전망] 2020년 잠정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유럽 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2021년에 3.6~4.2%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백신 개발 및 접종 진행과 대유행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경제성장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백신 접종 지연, 백신의 불균등 공급 등은 유럽 및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요인임.
 - OECD, IMF 등은 백신 접종 기피현상, 백신 민족주의 등 백신의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종을 방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권고함.
 - 또한 국제기구들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회복하고, 의료자원 생산과 보급을 원활히 하며, 필수재 및 노동력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 [백신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우선순위 확립을 통한 혼란 최소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백신 기피현상 방지, 여행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함.
 - 유럽은 고령층, 의료진 등에 대한 우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 접종 순서에 대해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감염 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백신 기피현상은 접종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백신 여권 도입이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이승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eungholee@kiep.go.kr, Tel: 044-414-1211)

◎ 2021년 1월 20일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 전임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중미 3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임.
- [멕시코] 안보협력, USMCA(신북미무역협정)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환경 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베네수엘라]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쿠바]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경쟁]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함.

◎ 미국의 중남미 내 리더십 회복은 궁극적으로 역내 호응 여부에 달려 있음.

- 민족주의 담론으로 탄생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현 정권이 미국 또는 미국이 위시한 다자 기구가 중심이 되는 대중남미 협력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임.
- 2021년 중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 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 2020년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4/4분기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9% 감소, 대중 수출도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7.7% 감소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4억 4,310만 달러로, 전년(-23억 6,000만 달러)대비 81.2% 개선됨.
 - 3/4분기까지 북중 무역은 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 수출입 감소는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 둔화 및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영향을 미침.
 - 농업 부문에서 ‘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였던 식품 분야 국산화(수입대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생산된 식료품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후생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전력과 광업 부문도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하여 다른 부문(화학, 금속)에 비해 생산량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북한은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수입 감소로 산업생산용 원료(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관 부문(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경공업은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임가공) 수출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임.
- ◎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 2/4분기부터는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을 중심으로 소규모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행사[노동당 대회(2021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2월)]가 마무리되었고,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통관 방역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소규모 무역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재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남북 대화와 보건협력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Tel: 044-414-1064)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Tel: 044-414-1273)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 044-414-1323)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 ◎ **[제재 동향] 대(對)미얀마 제재는 미국과 EU 및 영국이 주도하고 국제개발기구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활하거나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얀마 군부 주요 인사 12명과 군부와 연계된 사업체 3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 List)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긴급 수출제한 조치, 미국 내 미얀마 자산 동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중단 등도 시행함.
 - 로힝자(Rohingya)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EU는 추후 쿠데타 책임자 위주의 추가 제재와 함께 개발협력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역시 로힝자 사태로 인한 기존 제재 대상에 쿠데타와 연관된 인사 9명을 추가함과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함.
 - 최대 지원국인 일본은 정부간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지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음.
 - 미얀마 최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그룹도 2월 1일부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함.
 - 아세안은 전체적으로 '내정불간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3월 2일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 특별 외무장관회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이 끝남.
 - 논의되거나 예상되는 제재 가운데 군부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개발 재원에 대한 지원 중단은 개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의 사회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시사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거나 미얀마 내 상황이 악화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상황의 급반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나아가 단계별 혹은 시나리오별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 보호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미국 주도의 ODA 중단 및 금융거래 정지를 대비하여 대미얀마 경제협력 전략,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 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되면 미얀마와의 직접적인 교역 및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제3국(미국, EU 등) 수출입도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ODA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경우 유사차관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협력사업과 지식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미얀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있어서 경제협력 다변화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미얀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음.

인도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외교 동향과 시사점

노윤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Tel: 044-414-1143)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 ◎ [백신 개발] 2021년 3월 1일 기준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12개의 코로나19 백신 중 6개가 인도(2개)와 중국(4개)에서 개발되면서 양국의 백신 생산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인도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인도의 세럼연구소가 생산한 코비실드와 인도 자체 제약회사인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받음.
 - 중국은 시노팜 백신 2종과 시노백, 칸시노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해외 다수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및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백신 외에도 인도에서는 7개, 중국에서는 10개의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양국은 백신 개발에서 선두 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임.
- ◎ [백신 외교] 인도와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백신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인도는 이웃 국가 우선정책하에 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백신 680만 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1,650만 도스를 상업적으로 공급함.
 - 중국은 백신 개발 단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53개국에 대한 백신 원조와 22개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통하여 백신 외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인도와 중국의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이 영상 2~8도의 환경에서도 유통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초저온 유통 구조가 취약하거나 선진국과의 백신 경쟁에 밀려 백신 획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백신 공급 경쟁을 통해 양국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시사점] 한국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백신 및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 참여자와 연구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도 향후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계협력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다국적 보건협력 체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임.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mjkgang@kiep.go.kr, Tel: 044-414-1196)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 신뢰,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와 부속서로 구성됨.

*통합문서는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정리한 것임.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차, 운송 서비스 등
-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과 책임,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등
-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
- 공통 이슈: 투명성, 국내 규제와 협력,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

◎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은 데이터 관련 쟁점 조항을 둘러싼 협상 참여국(그룹)간 대립임.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겨냥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모라토리엄 여부)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대립 구도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과 협상 참여국간 국내법 제정 수준과 협상 관심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재적 갈등 구조가 협상으로 옮겨왔다는 점임.
- 이 밖에도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에 대한 불만, 규제 선택의 제약과 순응비용 상승 우려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됨.

◎ MC-12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 2021년 11월에 개최될 MC-12(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성과로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2년 연장 선언, 이견이 좁혀진 협상용 통합문서 도출, 협상 참여국의 참여 지속과 노력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예상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중간 점검과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

- 협상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개도국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부 조항(예, 금융 분야)은 한국에도 무거운 규제 순응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비·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강화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하며, 국내 규제·제도·법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이권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선임연구위원 (khlee@kiep.go.kr, Tel: 044-414-1073)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Tel: 044-414-1165)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기존 대중동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및 유럽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이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역내 영향력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의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타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사법제도 개혁 및 여성 인권운동가 석방 등을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추고자 함.
- [UAE] UAE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변국에 대한 개입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에서만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집트] 바이든 행정부는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이집트 정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이란 제재 완화, 예멘 내전 등을 둘러싼 당사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은 지속되겠으나, 새로운 역내 환경에서도 한국과 중동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원유 수급 안정화 및 국내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항시적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담당자와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함.
-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보건, 의료, 교육, 학술, 예술 등 비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이란 경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랍 왕정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아랍 국가·이스라엘 간 삼각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기반의 디지털·그린 기술 공동 개발과 스타트업 공동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브라질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의 주요 내용과 평가

홍성우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 ◎ 브라질의 에너지 공급은 전통적으로 석유, 바이오 연료,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바이오 연료의 공급이 증가하고 석유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전원 구성에서는 수력발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풍력발전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석유,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80.3%를 차지하였으며, 전원 구성에서는 수력발전 비중이 63.6%, 천연가스 9.66%, 풍력 8.94%, 바이오 연료 8.71%를 기록함.
- ◎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국가 에너지 계획 2050(Plano Nacional de Energia 2050)'은 2050년까지 브라질의 에너지 생산이 국내 수요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주요 에너지원별 생산 전망 및 해결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비재생에너지(non-renewable)의 생산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순(net) 에너지 생산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수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부차적으로는 관개 및 홍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발전용량을 확대하고자 함.
 - [풍력] 북동부 내륙에서 주로 생산되며, 잠재 생산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
 -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의 전 세계 생산량 중 80%를 미국과 브라질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연료 다양화와 생산 증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석탄] 매장된 석탄의 품질이 낮고,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해외시장 수출도 어려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량을 줄이고자 함.
 - [석유] 암염하층 지대의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2030년에 550만 배럴/일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205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은 중장기적 에너지 믹스 구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것이 탄소배출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은 부재함.
 - 하지만 환경문제를 둘러싼 브라질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마찰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매년 발표되는 '에너지 확대 10개년 계획'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에너지 믹스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Tel: 044-414-120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jjeong@kiep.go.kr, Tel: 044-414-1225)

박규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tpark@kiep.go.kr, Tel: 044-414-1293)

- ◎ [정책 방향]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함.
 - 바이든-해리스 어젠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의 번영, 평화·안보 확립,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다자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미·아프리카 파트너십 활용, 미·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 [분야별 주요 정책]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적극적 활용,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의 통상 확대,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일부 분야 원조 재개, 기후변화 관련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미·아프리카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에서 AGOA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AfCFTA를 통한 미·아프리카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 미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 재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안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군사협력, 아프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제어를 위해 아프리카와 보다 적극적인 다자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철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난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시사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다자협력 강화, 아프리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등 다자 채널을 이용한 협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중동, 터키 등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외교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AfCFTA, AGOA 등 다자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상협정과 특혜 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다자무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KOAFEC)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연합과 보건의로, 무역통상, 그린뉴딜 등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아프리카 수자원 고갈, 농업 생산성 하락, 분쟁 및 식량안보 위협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복원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통상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
- [②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기후중립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 [③ 디지털 전환]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규범 마련
-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국제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 정비
- [⑤ 무역 대상국 확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 및 강화
- [⑥ 공정경쟁] 불공정한 무역관행 배제와 TSD 챗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한 EU 무역 규제 수립

◎ EU의 신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및 디지털 관련 규제 강화, WTO 개혁 논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통상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특히 친환경, 디지털 산업 및 필수약품 산업에서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SD) 관련 조항의 이행과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환경, 노동,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11월 개최 예정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EU와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 ‘14.5 계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14.5 계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되었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임.
 - ‘14.5 계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계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하여, 기후변화, 노동, 지적권, 국유기업 개혁(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예상치(8~9%)를 하회한 ‘6% 이상’으로 제시되어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 능력 제고, 공급측 구조개혁, 수요측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 2021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이다.
- ◎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으로 보이지만, 핵심 기술의 자주혁신과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이 일대일로와 공동협력 수준을 제고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송지혜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044-414-1074)

- ◎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은 개도국의 자립·자주적인 발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투자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공여국은 △민간기업 참여에 우호적인 기반환경 조성 △시장 제약요인 해소 △기업주도식 참여활동 추진 방식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과의 직접적 협력, 민간 금융기구와의 협력 등 이른바 ‘민간부문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 공적자금과 연계된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 규모는 2018년 484억 달러로, 2012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 주요 금융수단은 보증, 신디케이트론, 직접투자, 크레디트라인 등이며,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s)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공여국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 네덜란드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외교정책의 중요 축으로 유지해온 국가로, 국제협력 정책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 추구하고 이를 통한 개도국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18년에 공개한 개발협력 정책에서 자국의 국제적 이익 추구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자국 기업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민간부문개발 성과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목표와 주요 분야, 세부 프로그램, 성과측정 지표 등을 제시함.
- ◎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크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기업이 정신 육성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기업청(RVO)과 기업개발은행(FMO)이 주축이 되어 자국 기업의 개도국 개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RVO는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재원 제공 및 자문 서비스를 담당하며, 자국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프로그램과 자국 기업의 대(對)개도국 투자, 수출입 지원, 현지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FMO는 개도국에서 특정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초기 자본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RVO와 FMO는 각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건전성, 즉 ESG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SDGs 기여를 추구하고 있음.
- ◎ 네덜란드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①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② 범정부 차원의 방향성 부재·지원 메커니즘의 단순성 ③ 상생 추구 계획의 부재가 제약요인으로 파악됨.
 - 이에 본고는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방향성 수립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도구 개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상생의 가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 참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제안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 관계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

◎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압박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장기전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음.
-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3월 미국 내 ICT 공급망 보호조치, 3월 「외국기업책임법」 도입 시작 등
-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쌍순환(雙循環) 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중국 정부의 중장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음.
- 쌍순환 전략의 목적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사슬 구축에 있으며,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은 기술 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의 회복’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문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문제 해결은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의 비교우위 유지를 통한 미국경제 쇄신 및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미·중 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한미·한중 네트워크 강화 △공급망 재편의 위협요인 분석 및 기회요인 활용 △법제도 정비 △유사 상황국과의 연대 등을 중요한 대응방향으로 제시함.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044-414-1029)

- ◎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 (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편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절차의 투명성 제고임.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현행 55%) ②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상향 조정(현행 20~30%) ③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변경(현행 '비용' 중심)
 - [예외적용 관리 강화] ①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② 예외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③ 상용 물품 및 정보 기술을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④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 엄격화] 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②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 마련
 - 그 외 중소기업 우대조치 강화, 미국 내 화물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 의무화 포함
- ◎ 'Made in America'를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더욱이 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달 분야에서 공약한 여러 정책의제 중 일부에 대한 행정명령인바, 향후 의약품, 에너지, 자동차, 정보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행정명령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된 미국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변환하고, 미국이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GPA/FTA 개정 협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음.
-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견서에는 EU, 중국, 인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

◎ 2021년 NTE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장벽의 주요 내용

- [한국] 2020년 5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에 대한 우려
- [유럽]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미·EU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결정(USTR은 디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 2020년 12월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 [중국] 2020년 10월 중국에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 전자결제 서비스사업 인증(USTR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관 지어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를 덧붙임)
- [디지털 서비스세] 2021년 NTE 보고서에서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 이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 제한적인(restrictive)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디지털 기업의 불만사항이 반복해서 제기됨.

- EU GDPR의 이행 및 행정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사항,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와 강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제기되는 미국 측의 불만사항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불만으로는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201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등이 두드러짐.

◎ 정책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임.

- 디지털 기업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말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발의된 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비판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Tel: 044-414-1273)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 인프라 투자는 8년간 이루어지는데 크게 △운송 인프라 △제조업·혁신 △돌봄 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IRS)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1.75조 달러 추정)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무디스(Moody's)는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가 경기부양책과 자연적 일자리 증가로 생겨나며,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민주당은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고 도로,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경우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회계연도 20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표결하기 위하여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한국의 수출, 투자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 현실화, 고위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함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며 법인세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OPEC+의 단계적 증산 결정 배경 및 시사점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Tel: 044-414-1165)

- ◎ 2021년 4월 1일 OPEC+ 국가들은 향후 감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오는 7월까지 현행 감산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 '21년 4월 현재 OPEC+ 국가들은 일평균 69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5월과 6월에는 각각 일일 35만 배럴, 7월에는 일일 44.1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합의와는 별도로 일일 100만 배럴 규모의 자체 감산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을 발표
- ◎ OPEC+ 국가들의 재정 확보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란, 리비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회복으로 감산조치의 유가 부양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단계적 증산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
 -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 [미국 산유량 회복 조짐 확대]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OPEC+ 감산 조치의 효과 축소에 대한 우려 증대
 - [감산 예외국의 증산 가능성] 현재 OPEC+ 체제 내에서 감산 예외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OPEC+에게는 우려스러운 부분
 - [각국 재정상황 개선 필요성] 코로나19 여파로 OPEC+ 국가들의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감산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의 재정 압박 심화
- ◎ OPEC+ 국가들의 감산 공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감산량 조절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급 확대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OPEC+가 현행 감산 정책을 급격히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원유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는 등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동성 확대 요인이 다수인 상황
- ◎ OPEC+의 단계적 증산 결정으로 공급발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유가 급등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전망
 - OPEC+가 증산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감산규모 축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감산 공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
 - 반대로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부족 심화로 인한 일시적인 유가 급등 우려도 완화
 - 수요 측 요인으로 유가 변동성이 단기간 확대될 수 있으나, OPEC+가 공급량 조절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국제유가는 추세적인 흐름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Tel: 044-414-1089)

박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

유새별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sbyoo@kiep.go.kr Tel: 044-414-1083)

◎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 (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능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WTO 차원의 코로나19 극복 논의와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새로운 분야 협상이 활성화됨.**

- 코로나19 극복은 WTO 체제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분야로,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한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면제 논의와 상품·서비스 무역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협상은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조항별 문안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등이 쟁점임.
- 투자원활화협상은 투자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와 개도국 예외조치가 쟁점임.
- 중소기업, 서비스 국내 규제는 추가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과 환경 분야는 MC12까지 향후 협상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산, 농업, 산업보조금, 분쟁해결기구 개혁 등에 대한 DDA 논의는 수산보조금협상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수산보조금협상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기준과 규율방식, 개도국 특별대우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 농업협상은 회원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보조금, 상소기구 개혁은 선진 국간에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MC12의 기대성과는 분야별로 다르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수산보조금협상의 성공 여부는 WTO 협상 기능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수산보조금협상은 MC12에서 합의가 기대되는 유일한 다자협상이며, 개도국 예외조항의 수준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MC12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TRIPS 면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상품·서비스 무역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와 같이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나 의장 초안이 도출된 협상에서는 MC12까지 쟁점이 적은 부분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여성과 환경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협력 노력을 촉구 하고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분야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상 참여가 요구됨.**

-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무역환경이므로, WTO 기능 회복의 기점이 될 수 있는 MC12에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보건, 환경 등 신규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은 다자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혜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협상전략도 그에 맞춰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국 화남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위원 (hjung@kiep.go.kr, 044-414-1280)

- ◎ 광둥(广东)·푸젠(福建)·하이난(海南)으로 구성된 화남지역은 14·5 계획기간 ‘혁신’을 최우선으로 내수확대, 산업 고도화·디지털화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제도 개방을 본격화할 전망
 -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화남지역의 비교우위인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협력(광둥) 및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하이난)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를 강화할 방침
 - 여기에는 일국양제(一国两制)의 성공적 추진과 미·중 갈등 속 홍콩 기능의 역대 대체 등을 고려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작용할 전망
- ◎ 화남지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광둥성은 14·5 기간 ‘원천기술 혁신 중심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홍콩·마카오와의 시장 통합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둘 전망
 - 광둥은 혁신 분야의 취약점인 기초연구,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인재, 혁신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인재·자금·네트워크 및 시장시스템 측면의 경쟁우위가 높은 홍콩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
 - 특히 전략산업 세부정책, 핵심기업, 산학연 연대를 강화하면서 2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첨단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또한 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Great Bay Area)’를 중심으로 시장 접근, 표준인정, 재산권 보호 분야까지 통합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며, 개혁자율권이 부여된 선전(深圳) 시에서는 법률·의료·금융 개방이 심화될 전망
 - 다만 미·중 갈등으로 GVC의 탈중국화 및 홍콩의 불안정성 등이 심화될 경우, GVC 참여도가 높은 광둥의 혁신 발전 및 시장화 수준 제고 등이 제약될 수 있음.
- ◎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조성에 필요한 무역·투자 자유화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관광, 의료, 해양 등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전망
 - 무관세·저세율 적용 확대, 서비스무역 제도 혁신, 독립관세구역 조성 등을 가속화하고, 국경간 자본 이동의 자유화 및 편의성 제고(다기능 자유무역계좌 시스템 도입) 등 금융·재정 제도의 개혁을 강화할 방침
- ◎ 14·5 기간 GBA 및 자유무역항 관련 제도 개방이 지속되어 홍콩의 주요 기능이 광둥(무역·법률·의료·금융) 및 하이난(면세쇼핑·무역·의료관광) 등으로 더욱 분산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개방 확대조치를 한·중 경제협력에 활용할 필요
 - GBA 내 과학기술 혁신센터는 중국·홍콩의 혁신자원과 정책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지적권 보호 및 법적 보장 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R&D를 수반한 중국 진출 시 고려할 필요
 - 한·중 산업(단지) 협력 시 GBA 내 홍콩·마카오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 자유무역항에 적용된 우대 세율 및 자금 유출입 편의성 제고조치 등과 유사한 수준의 우대를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면세 쇼핑, 의료관광 분야의 우리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 한편 광둥의 공급망 강화 업종 중 반도체·전자, 화학, 자동차, 첨단설비·신소재, 바이오의약, 디지털 콘텐츠 등 다수가 한국의 중점 산업과 중복되어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중국내제조혁신경쟁력이 가장우수한광둥은한국과휴대폰등전자분야를중심으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현상 및 해외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중국 역대 공급망 참여에 대한 기회 및 리스크 분석과 함께, 민감기술을 제외한 분야에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목적의 역내 공급망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044-414-1127)

- ◎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여 년 동안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됨.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커져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로 변화됨.
- ◎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중일 외교문제로 인한 대일(對日) 및 대중(對中) 소부장 공급망 재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부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고,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처 변경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일 및 대중 수입의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비중(77.2%)을 차지하였고, 일본은 ‘우리의 기술력 부족과 국내 미생산’, 그리고 ‘좋은 품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86.5%)을 차지하여 당분간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그러나 한중일은 자연재해나 미중 분쟁 등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기존의 비용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반한 GVC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핵심 소부장 산업의 전략 무기화 추세가 강화되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對)중국 차단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로서는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심지어 GVC 참여 정도가 낮은 소부장 기업들조차 수입 불안정성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관리가 중요하며, 공급망의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잠재적 위험 국가로부터 합리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자립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요도에 비해 특별히 낮은 자립도를 보이는 산업군은 주의가 필요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자립도는 2001년 33.6%에서 최근 39.5%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며, 기업설문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81.8%,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9.1%를 차지해 이 둘을 합치면 91%에 육박하는바,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보임.
- 지난 20년간 중국 소부장 산업의 발전 속도를 통해 볼 때 한중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중국 중심의 소부장 GVC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지배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범용기술을 벗어나 보다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에 근거해 도출한 본고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동남아 중시정책을 계승하여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약화되었던 역내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는 아세안 정상외교 강화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BRI(Belt and Road Initiative)를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임.
- ◎ 중국이 RCEP 체결과 BRI를 앞세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동남아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미국으로서는 RCEP에 대응할 대안적 협정을 모색해야 하나 국내 경제회복 문제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BRI를 견제할 자본과 추진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 ◎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가치 외교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의 군사·안보 협력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대외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미국의 신(新)인태 전략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면서 한·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인태 전략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동남아 내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적 차원보다는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협력 및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한·미 협력과제 발굴 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등을 통해 제시한 중점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베트남 환율조작국 이슈 등은 미얀마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관찰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철회하고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됨.
 - 최근 베트남이 환율조작국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베트남이 중국의 주요 우회 수출기지로 지목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 ◎ 2021년 4월 1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실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함.
- ◎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대중 공급망 분리, 아시아 역내 안보,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기후변화]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 단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에 그쳤으며, 희토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음.
 -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
 - 미·일 공동선언문에 대만문제가 명시된 것은 닉슨-사토 회담 후 52년 만이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한발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 [코로나19 대응]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기초를 전면내 내세우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추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드러날 것임.
-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배제에 대한 동참, 기후변화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 등 어려운 요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후속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논의 내용을 보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 절감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중국 동북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 ◎ 라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으로 구성된 동북지역은 14·5 계획기간 혁신 및 산업 업그레이드, 대외협력을 통한 핵심기술력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중시함.
 -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발전과 함께 지역별 우위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형산업 육성으로 현대적 산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부족한 핵심기술력 강화에 대외 협력의 중점을 두고자 함.
 -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14·5 계획에서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강조함.
- ◎ 지역별로 라오닝은 ‘디지털 라오닝 건설’, 지린은 ‘자동차제조업의 역량 강화’, 헤이룽장은 ‘중국 최대 개간지를 활용한 농업현대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디지털경제성장률이저조한라오닝은디지털기초인프라확충및플랫폼건설, 기업및정부의디지털화 지원, 데이터 자원 관리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지린은 지주산업인 자동차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핵심부품 및 완성차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로컬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방침임.
 - 풍부한 농산물 및 천연자원을 보유한 헤이룽장은 안정적인 식량생산, 식품가공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시장 구축, 탄소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중시할 방침임.
- ◎ 특히 동북지역은 경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14·5 계획기간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간 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현대화 역시 중시할 전망이다.
 - 라오닝과 지린은 산학연 협업, 기술혁신, 과학기술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일회성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투자를 더욱 중시할 전망이다.
 - 동북지역간 중복투자 및 기업유치 경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중앙-동북 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동북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요 곡창지대인 헤이룽장과 지린의 농업현대화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 ◎ 한국은 동북지역의 14·5 계획을 고려하여 전자집적회로, 스마트팜, 신소재 개발 등 분야에서 동북 지역 진출 및 기술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13·5 계획기간에는 한국의 대동북지역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자집적회로, 광천수,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이 주요 교역품목으로 새롭게 부각되었음.
 - 14·5 계획기간 디지털 경제를 본격 육성할 계획인 라오닝의 수요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공장·설비, 관련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헤이룽장은농업기술개발및신소재개발을중시하고있어한국이우위를가진스마트팜및그래핀 제조에서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보급 현황과 시사점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전 세계 최초로 등록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4월 25일 기준 1차 백신접종률 7.8%를 기록함.
 - 당초 러시아 보건당국은 백신접종률 60%를 달성하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1년 여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한다면 연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스푸트니크 V가 2차 임상시험 직후 러시아 보건부에 조기 등록되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생산·사용되고 있음.
 - 3차 임상시험 결과 스푸트니크 V의 면역효과는 91.6%이며, 보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증으로 나타남.
 - 스푸트니크 V 분말형은 냉장보관이 가능해 운송 및 유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1회분 비용이 약 10달러로 가격 경쟁력이 있음.
 - 스푸트니크 V는 주로 구(舊)사회주의권, 중동, 중남미 등 총 63개 국가에서 승인(주로 긴급사용 목적)되었고, 28개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서 생산 중이거나 또는 생산될 예정임.
 - 기존에 스푸트니크 V를 승인 및 사용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이지만, WHO, EMA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 한국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위탁생산과 연계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한·러 간 보건·의료 및 바이오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급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정부는 백신 수급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신북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러시아 백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한·러 간 의약품 제조, 의료산업의 가치사슬 구축,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 기술·제품 개발 등 보건 의료 및 바이오산업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한 제3국 수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 USTR 보고서를 중심으로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1. 3. 1),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1. 3. 31), 「2020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1. 1. 15)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외 통상 및 대중국 통상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 이익 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상정책 9대 우선순위의 하나로 설정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임.
- 이전의 불공정 무역관행 이외에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관련 인권침해 및 환율조작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통상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표출함.
- 중국의 무역의무 불이행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의 무역장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추가하고, 중국의 WTO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지재권 침해·강제기술이전·국유기업·보조금·반독점법을 주요 무역장벽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중국의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투명성 및 강제 제출의무 부과를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추가함.
- [2020 WTO 이행평가 보고서] 국유기업,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등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비롯하여 지재권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행정부와 유사함.

◎ 현재 이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미국의 구체적인 대중 통상제재 및 동맹국과의 공동대응 방식은 아직 불투명하나,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중 간 통상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속성상 대부분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강제노동·인권침해와 같은 불공정 노동관행을 대중 통상제재의 추가 명분으로 삼을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Tel: 044-414-1064)

- ◎ **美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계 재건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함.**
-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이슈별 정책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통상·산업] ①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21%’ 제안 및 WTO 개혁의지를 통해 EU와 협력 기대 ②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추가관세 결정을 일부(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유지함에 따라 미·EU 간 통상갈등 상존
 - [기후변화·환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미국은 EU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외교·안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국 인식을 갖고 있으나 견제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여, EU와의 정책공조는 사안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
-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협력 강화 및 관계 회복을 희망하나, 양국간 주요현안에서 이견이 존재함.**
 -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및 유럽 내 안보분야의 높은 대미국 의존성,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 및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등에서 각각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가능성을 갖고 있음.
-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유럽 관계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사안별로 미국과 EU가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달리할 것임.**

중국 화동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 ◎ 상하이(上海市)·장쑤성(江苏省)·저장성(浙江省)을 포함하는 화동지역은 14·5 계획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대외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내의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 14·5 계획기간에 경제성장보다는 디지털 경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고도화를 강조하면서 ‘창장삼각주 통합 발전 전략’을 통한 시장 통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
 -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화동지역을 활용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을 강화하고, 41개의 도시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권을 활용한 소비구조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 제조업 핵심지역인 장쑤성은 14·5 기간 ‘첨단 제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
 - 장쑤는 기초연구 강화와 더불어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의 풍부한 인력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바이오 의약 등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부품·소재·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장삼각주에 제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에 주력할 전망
 - 특히 일본·싱가포르·한국·유럽 등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국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방침
- ◎ 화동지역의 중요한 대외개방 창구인 상하이(上海)는 ‘대외경쟁력을 통한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금융 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전망
 - 상하이는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외협력 강화, 해외자본 유입 원활화, 무역 안정화, 해운 및 항공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가용성을 확대할 계획
 - 5G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무역을 위한 시범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외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와 협력 관련 표준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
 - 또한 선물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개발과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 14·5 기간 화동지역은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 등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 고도화와 대외개방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장쑤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산업단지 내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을 통해 현지 한국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체제가 필요함.
- ◎ 한편 장쑤가 추진하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와 상하이가 추진하는 금융·원자재 부문의 국제 영향력 확대 계획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
 - 장쑤가 조성 중인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로 인하여 반도체·바이오 의약·이차전지 등 고급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중국기업이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과 함께 국제 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
 - ‘금융법치시험구(金融法治试验区)’ 조성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하이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외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원자재 확보 역량 강화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 서부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 ◎ 중국 14·5 계획기간 충칭(重庆)시, 쓰촨(四川)성, 윈난(云南)성 등 서부지역은 △혁신수준 제고 △내수 및 개방 확대 △광역 도시경제권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13·5 계획기간 6.2%의 경제성장을 이룬 서부지역은 14·5 계획기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 혁신 수준 향상과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통한 질적 발전을 동시에 강조
- ◎ 충칭시와 쓰촨성은 14·5 기간 두 지역 간 광역경제권 건설을 위해 서부과학거점을 중심으로 혁신자원을 집중하고, 산업을 공동 육성하며 대규모 통합·연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
 - 충칭시와 쓰촨성은 각각 충칭 서부과학거점과 청두 서부과학거점을 조성하고 청위(成渝) 종합과학센터를 공동 건설하여 서부지역 최대의 기초과학, R&D,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
 - 공동 산업단지 및 시범구를 통해 산업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청위 광역경제권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ICT,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
 - 두 지역의 통합생활권 형성을 위해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주증, 호적제도, 사회보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인구가동을 자유롭게 할 방침
- ◎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와 접경한 윈난성은 중국의 대(對)남아시아·동남아시아 협력기지로 거듭나고자 교통·물류망 구축, 산업협력 플랫폼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실행할 계획
 - 기초인프라 및 산업 기반이 취약한 농업 중심지역인 윈난성은 중국의 남아시아·동남아 진출기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
 - 윈난성은 미얀마, 라오스와의 철도 및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원자재, 금융, 관광, 전자상거래,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전역의 주요 기업들과 ASEAN 간 연계 협력을 도모할 계획임.
- ◎ 서부지역의 대규모 투자확대가 14·5 기간 서부지역 내수 확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회요인이 될 것이나 지방부채 가중, 중복투자 등 리스크도 존재
 - 서부지역 주민의 소득 및 소비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지방채 발행에 의존한 투자확대로 중장기적인 재정 리스크가 상존함.
 - 쓰촨성과 충칭시의 광역경제권 건설의 경우 오랜 기간 지역 간 이권경쟁, 중복투자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의견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
- ◎ 서부지역의 산업고도화와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한·중 ICT 기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은 서부의 내수 확대를 활용해 소비재 및 서비스 업종에 진출할 수 있으며 윈난성 등 서부 접경지역을 통한 남아시아·ASEAN 우회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등 ICT 제조기지와 국가급 빅데이터 기지인 구이저우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ICT 소재·부품·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화장품, 식·음료,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 등 업종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판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부지역 투자 시 개정된 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참고해 지역별 우대산업(법인세율 15%)으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Tel: 044-414-1037)

◎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통해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40개국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을 논의함.
-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나, 차후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정책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정책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됨.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기후재원 조성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하에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조치와 기후행동이 요구됨.
-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적정 투자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선진국-개도국, 공공-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감축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국제 무역질서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쟁점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현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함.
-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탄소가격제 국제협력]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간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미국의 공공 및 민간 기금이 국내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2021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 ◎ [세계경제] KIEP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종전 전망치 대비 0.9%p 상향 조정하고,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3%로 전망
 -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접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경제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을 위시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선진국] 백신의 공급과 접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
 - 미국은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및 접종자 수 확대 △고용시장의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 △교역증가 등이 완전한 회복을 이끌 전망
 -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소비확산 재개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지속 △ECB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 유지 △수출의 완만한 성장 등이 예상
 - 일본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지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여부 및 개최 형태 △긴급사태선언의 발령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서는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 ◎ [신흥국]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인도, 아세안 5개국, 러시아, 브라질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 대내적 여건과 △원자재 가격 추이 △추가 제재 여부 등 대외적 여건에 따라서 경기회복 속도가 결정될 전망
 - 중국은 △백신접종 범위의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고용여건의 개선 등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빠른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전망
 -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도 내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진입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백신접종의 지연과 3차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
 - 러시아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할 전망
 - 브라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추세는 유지될 전망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노윤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Tel: 044-414-1143)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 ◎ 2021년 3월 중순 이후 인도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는 2차 대유행을 겪고 있음.
 - 인도는 5월 12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약 34만 명과 일일 사망자 수 약 4,200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34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5만 명에 이룸.
 -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상 및 의료 관련 장비, 의료용 산소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도 내 의료서비스 역량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 내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중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함.
- ◎ 인도 중앙정부는 백신과 치료제의 국외 반출 제한 및 의료용 산소 등 관련 장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폭증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정부들은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3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11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제조용 원재료의 수출중단 조치를 시행하였고, 4월 22일에는 의료용 산소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약·정유·철강·원자력 등의 9개 산업을 제외한 산업용 산소 공급을 금지함.
 - 주정부는 봉쇄조치 시행과 함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력 및 시설을 제외한 모임과 관련 시설의 운영중단 방침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한국·영국·러시아·파키스탄·EU 등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비 및 치료제 등의 물자를 공급하고 있음.
- ◎ 봉쇄가 재개됨에 따라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부채 확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인도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4월에는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외국 자금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루피의 달러 대비 환율도 2020년 8월 이래 최고점을 기록함.
 - 이에 여러 기관은 1/4분기에 발표된 인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하향 조정함.
 - 한편 투자은행들은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 각종 종교행사 허가 및 선거유세에서의 느슨한 방역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음.
- ◎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무상 ODA 확대가 필요함.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 [이슈와 쟁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군축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갈등의 본질]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구도의 이면에는 양국간 세계질서에 대한 시각, 지정학적 이해관계, 가치규범 등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함.
- [미국이 보는 러시아]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가 보는 미국] 푸틴 정부는 철저한 진영 논리와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함.
- [당면 현안]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당면 현안 과제들로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 등의 지정학적 갈등 △노르드스트림-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에 대한 사이버 해킹 △나발리 사건 관련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에너지(셰일가스와 천연가스) 패권 다툼 △북극 및 우주 개발 경쟁 등이 있음.

◎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바이든 시기 대러 경제제재가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제재의 특징] 바이든 정부의 대러 경제제재는 본질상 ‘특정 개인 및 집단(기업) 대상의 금융활동을 주로 제약하는 부문별 제재(sectoral sanction)’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와 유사함.
- [경제적 영향] 제재 대상(민간)의 금융 제약에 기인하는 △채권 및 주식의 기대 수익률 저하 △수익의 불확실성 증대 △부정적 자산 효과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 [러시아의 대응] △달러화 자산·부채 비중 축소 △달러화 국제거래 비중 축소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활용한 지역 경제협력 강화 등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임.

◎ [러-미 관계 전망]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양국간 갈등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계의 속성]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성격 자체가 이미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도전과 응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관계의 발전 가능성] 바이든 시기 양국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상황과 제반 여건, 양측 지도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향후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국 중부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 ◎ 후베이(湖北)·허난(河南)·안후이(安徽)·후난(湖南)·장시(江西)·산시(山西) 6개 성을 포함하는 중국 중부지역은 14·5 계획기간 제조업 첨단화 및 교통·낙후지역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 저임 노동력 기반의 제조업이 발전한 중부지역은 동부 연해지역 대비 낮은 혁신 역량 및 서부지역·동남아 등지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제조업 첨단화 필요성에 직면
 - 역내외 주요 도시간 교통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투자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 후베이성은 거점도시 중심으로 성 전역을 커버하는 도시군을 조성해, 역내 교통망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과도한 우한(武汉) 중심 구조를 완화시킬 계획
 - 우한과 후베이성 내 주요 지역간 고속도로 연결사업에 총 7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
 - 후베이성 경제의 35.4%를 차지하는 우한시는 향후 서비스업·R&D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선진제조업·신산업은 상양(襄陽)·이창(宜昌)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할 도시군에서 발전시킬 계획
- ◎ 허난성은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핵심부품의 자체 공급을 강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전망
 - 첨단기술기업, 제조업 혁신센터, R&D 기관 확충 및 기술 투자 확대로 기술 발전 도모
 - 장비제조·전자제조 등 지주산업에 연간 공업총생산액 1조 위안 수준의 6개 클러스터, 바이오의약·스마트장비 등 신산업에 연간 공업총생산액 1,000억 위안 이상의 10개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허난성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핵심부품 자급률 제고
- ◎ 안후이성은 14·5 기간 본격 추진될 창장삼각주(长三角) 통합발전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역내 교통·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할 전망
 - 고속철·도시철도 확충으로 안후이성과 상하이(上海)·저장(浙江)·장쑤(江苏) 주요 도시간 2시간 교통권을 구축할 방침
 -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상하이·저장·장쑤의 인재·과학기술·자금을 활용해 안후이성의 과학기술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가전·전자정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
- ◎ 14·5 기간 중부지역의 제조업 첨단화·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자체 공급망 강화에 따른 우리의 수출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후베이성의 경우 우한과는 서비스업·과학기술 R&D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허난성은 제조업 첨단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수입 수요 파악이 필요
 - 허난성은 지역 대표 생산품인 휴대폰의 자체 부품 공급능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대허난성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집적회로·액정디바이스 등의 수요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상하이·저장·장쑤 소비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최근 소비증가가 빠르고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는 안후이성의 소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카자흐스탄은 2021년 2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4월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양국의 백신 종류 및 접종 순서 등에 차이가 있음.

- 카자흐스탄은 4월 30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6.8%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4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7%에게 백신을 투약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자체 개발한 QAZVAC 백신, 중국의 Hayat-Vax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oviShield 백신, 중국과 공동 개발한 ZF-UZ-VAC 2001 백신,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양국은 접종 순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카자흐스탄은 직무 특성상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직종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고령층부터 연령별로 접종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자체 개발 백신인 QAZVAC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그 외 4개의 백신을 WHO 후보 백신으로 등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개의 후보 백신을 등록한 상태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QAZVAC 백신의 경우 생산시설 미비로 카자흐스탄에서 원료를 제공해 터키에서 충전·포장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잠빌주에 QAZVAC 백신의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말까지 백신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며, 스푸트니크-V 백신의 위탁생산을 위해 러시아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신북방 경제정책의 내실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정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백신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백신 개발 단계부터 접종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나 백신 양산시설, 포장용기 등이 부족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바, 한국과의 백신 생산 협력과 함께 제약·의료 분야의 협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중국 환발해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044-414-1283)

- ◎ 14·5 계획기간 베이징·톈진·허베이·산둥으로 구성된 환발해 지역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고도화, 디지털산업 발전 및 산업의 디지털화 발전에 집중할 계획
 -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은 베이징의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의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산둥은 인공지능·산업인터넷 기술의 산업화와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임.
 - 환발해 전 지역은 전략적 신흥산업, 미래산업, 선진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함.
- ◎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우수한 베이징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술·기업 등 혁신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중국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 중국 중앙 14·5 계획에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주도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 베이징을 ‘국제 과학기술 혁신 중심도시’로, 징진지 지역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 명시됨.
 - 베이징·톈진·허베이는 국가전략인 징진지 협동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수도 핵심기능 최적화 △혁신 자원 연계 강화 △역내 생산요소(노동·자본·기술·데이터) 이동 원활화를 강조함.
 - 베이징은 중국에서 과학기술 연구역량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성과의 사업화가 취약하여,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 징진지 내 혁신역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인 허베이는 숭안신구를 중심으로 베이징의 혁신자원(과학연구기관·첨단기술기업·인재)을 도입하는 등 연계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 ◎ 산둥성은 차세대 정보기술을 10대 육성산업에 응용하여 성장동력 전환을 추진할 방침으로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산둥성은 특히 화학공업·방직·기계 등 업종에 산업인터넷을 응용하는 ‘전통산업 스마트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또한 10대 육성산업 클러스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37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업들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의 응용·스마트화’ 지원 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 ◎ 14·5 계획기간 환발해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려는 수소에너지와 산업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 생산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가격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해외 생산거점 중 한 곳으로 산둥성(연간 부생수소 생산량 중국 전체의 1/5)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수소 정제기술과 연료전지 등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은 산둥, 베이징, 허베이 등 현지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
 - 국가급 산업인터넷 발전 시범구로 지정된 산둥성은 중국 1위 산업인터넷 플랫폼인 카오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산업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례 연구 및 기업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2021. 4. 21).
 -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 (Greenwashing)를 차단하면서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① EU 기후 위임법률 ②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③ 6개의 위임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됨.
- ◎ [EU 기후 위임법률(Delegated Act)] EU 분류체계(EU Taxonomy)상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목표와 연관된 경제활동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화·단순화·국제협력 등이 강조됨.
 - 기후 관련 환경적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준의 기술적 유용성과 정확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 제시, 판단기준의 단순화와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 EU 분류체계 기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 강조됨.
- ◎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존 비재무 보고지침을 보완·개정하면서 적용대상 확대, 보고 표준 도입, 공시에 대한 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
 -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과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기업 대상, 非EU 법인의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법인 포함) 공시정보(지속가능목표 달성 계획, 기업이 ESG에 미치는 영향)가 확대됨.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과 함께 EU의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 [6개 위임법률 개정안] 집합투자, 대체투자자,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 한국정부도 2021년 중 국내 산업계 및 금융업계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할 계획이며,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요구됨.
 - EU 집행위원회도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판단을 보류함.



칠레 제헌의회 선거결과와 전망

홍성우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 ◎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바, 보수 여당 연합은 3분의 1미만의 의석수를 보유하게 되어 현행 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 칠레 역사 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신(新)헌법 제정 움직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과거 군부독재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유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 칠레의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지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늘지 않는 소득과 줄지 않는 소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음을 가능성이 높음.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한 사실을 볼 때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 제헌의회 선거결과는 보수 여당 연합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들의 예상 밖 약진,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신헌법 제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피노체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칠레에서는 국영기업 중 96%가 민영화되었음.
- ◎ 제헌의회 선거에서 보수 연합 정당의 패배로 향후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칠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소속 제헌의원이 다수 선출되어 기존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또는 무소속 의원들 간 입장이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제헌과정이 복잡한 양상을 띠 가능성이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후 칠레 폐소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급락함.
- ◎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은 칠레가 과거에 추진해왔던 민영화 및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칠레 대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윤여준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정지현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강구상 선진경제실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최인아 신남방경제실 부연구위원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장영욱 선진경제실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김중혁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Tel: 044-414-1037)
 김승현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한하린 신북방경제실 연구원 (hlhan@kiep.go.kr, Tel: 044-414-1126)

-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다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 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추진동향

김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 kang@kiep.go.kr, 044-414-1196)

- ◎ 2020년 미국은 일본, 중국, EU와 무역협상을 일단락 짓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였으며, 브라질, 에콰도르, 피지, 케냐 등과의 협정을 추진함.
 - [일본] 상품과 디지털무역에 관한 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추가 협상의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환율 관련 내용 삽입 등이 언급된 바 있으나, 현재 새로운 논의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음.
 - [중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이며, 2021년 통상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결을 들었으나 새로운 협상 개시 여부는 알 수 없음.
 - [EU] 2020년 8월 농산물 중심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양측은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상호간에 부과한 관세를 4개월간 중단하는 데 합의한바, 앞으로 포괄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영국] 2020년 5월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나, 오는 7월 1일 대통령의 TPA가 만료될 예정이고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갱신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동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2020년 10월 소위 mini trade deal로서 무역규칙과 투명성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미국은 남미지역 내 커진 중국의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FTA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케냐] 2020년 7월 무역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는데, 2025년 만료 예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대체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협상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 ◎ 2020년 EU는 베트남과 FTA를 발효하고, 미국과 관세인하 패키지에 합의하였으며,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하고, 인도와 8년 만에 협상 재개를 선언함.
 - [베트남] 2020년 8월 1일 발효되면서 2019년 싱가포르에 이어 ASEAN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투자보호협정도 발효함.
 - [중국] 2020년 12월 30일 CAI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투자 보호와 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협상은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함. 협정 발효를 위해 EU는 의회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최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으로 EU 내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고 CAI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면서 CAI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2018년 4월 기존 협정(2000년 발효)을 대체할 무역협정에 합의하여 멕시코는 가금류, 치즈,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발효 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양측 모두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음.
 - [MERCOSUR] 2019년 6월 전 품목의 관세철폐, 노동권 강화와 환경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을 타결 하였으나, 저렴한 남미제품과의 경쟁에 대한 유럽 농민층의 우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둘러싼 마찰 등으로 단기간 내 비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아프리카] 코트누협정이 2021년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인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국가 32개국과 7개의 EP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서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와의 EPA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발효되지 않고 있음.
 - [인도] 2021년 5월 8년간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이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이예림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yrlee@kiep.go.kr, Tel: 044-414-1068)

-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글로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펀드를 중심으로 다자기구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바,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자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는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 우리나라는 COVAX AMC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전체 기여금의 0.15%)에 불과한 수준인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여가 필요함.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황운중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ujwhang@jbn.ac.kr, Tel: 063-270-3019)

◎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 비중은 각각 43.4%, 27.3%, 22.0%임.

◎ [해결 시급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 대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인증의 복잡성(81.0%)과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78.7%)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음(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결과도 유사).

- [디지털 상품 관련]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 시급성의 경우 고용자 수 25인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3.2%).

- [데이터 규제 관련]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71.4%)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6.1%).

◎ [업종별 실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업종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			
정보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34.8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33.3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24.0
통신	불필요한 통관서류	30.4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33.3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24.0
방송	전자인증의 복잡성	17.4	특정기술 사용 요구	20.8	컴퓨팅설비 사용·설치 요구	16.0
전문	전자인증의 복잡성	21.4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42.9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37.6
과학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21.4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21.4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31.3
기술	불필요한 통관서류	21.4	소액상품·전자전송물 과세	20.6	컴퓨팅설비 사용·설치 요구	12.5
도소매	상품 반품 절차의 복잡성	40.0	소액상품·전자전송물 과세	73.3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42.9
상품	전자인증의 복잡성	20.0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20.0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21.4
중개	불필요한 통관서류	20.0	특정기술 사용 요구	6.7	사이버 보안대책 요구	21.4

주: 숫자는 비중(%), 업종별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그룹(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별 비중의 총합은 100%.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중장기 디지털 무역정책 방향 설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수립이 긴요함.

- 디지털 무역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통계 개선,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지속적인 통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되나,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필요가 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Tel: 044-414-1230)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여,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정책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미·인 관계는 쿼드하에서 미국 우방국과 인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쿼드 외무장관 및 정상 회담을 신속히 개최하였고, 미·인 양국 행정부 장관의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하여 협력 방향을 논의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양국의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군사·안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인도는 군사 합동훈련 및 정보 교환 등 군사협력 확대를 합의하였고, 쿼드를 통한 다자 합동훈련, 핵심 신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공조 합의 등 군사·안보 관련 협력을 증대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 미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 협력을 담은 쿼드 ‘기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청정에너지 관련 미국의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코로나19] 미국과 인도는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백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한 쿼드 ‘백신 실무그룹’ 형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백신 원재료 수출의 긴급 승인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진단 키트 (RDT), 산소호흡기, 개인 보호장비(PPE) 등을 공급함.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국인 인도와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을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인 양국의 협력 방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공조가 필요함.

- 미·인 양국 협력은 쿼드 및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 분야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에너지, 5G, 인프라, 백신 분야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인 양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문제,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관한 강경한 기조는 양국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곽성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sikwak@kiep.go.kr, Tel: 044-414-1050)

- ◎ [배경]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21년 4월 말부터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동남아는 신속한 국경폐쇄, 덥고 습한 기후, 정부의 엄격한 방역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나, 2021년 4월 말 이후 인도 및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재확산에 직면
 - 베트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 부족 (6월 12일 기준 접종률은 1.44%로 ASEAN 회원국 중 최하위)으로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
- ◎ [주요 내용] 코로나19가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생산과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강력한 방역과 통제, 공동체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왔으나, 지난 5월 한 달간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4월 이전 총 누적 감염자 수(2,928명)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4,504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
 - 지역사회 감염이 산업단지 감염으로, 그리고 산업단지 감염이 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
 - 북부 공업단지(박닌, 박장)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지난 5월 수출은 전월대비 감소했고(-2.1%), 방역·봉쇄 조치로 회복세를 보이던 상품·서비스 소매판매도 5월에 전월대비 감소(-3.1%)
- ◎ [시사점]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장애, FDI 유입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미·중 갈등 상황하에서 공급망 재편 후보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베트남 당국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핵심 방역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백신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
 - 집단면역 달성 후 경제를 정상화한 선진국이 서둘러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증가한 가계부채와 부실채권은 베트남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애림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arkang@kiep.go.kr, Tel: 044-414-1113)

- ◎ EU 의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 3. 10),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내에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 [배경] EU 의회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를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EU 회원국 사이에 일관된 실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UN, OECD, ILO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국제원칙을 채택하고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사지침을 개발 하였으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몇몇 EU 회원국은 국제원칙과 실사지침을 기반으로 기업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안)을 제안 또는 시행하고 있으나, 각국의 상이한 실사 기준이 법적 불안정성 및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 [내용 및 전망]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은 EU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범산업 분야의 기업에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이 제안한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안)에 비해 ① 적용대상 기업이 증가하고 ② 환경실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EU 차원에서 기업실사 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 선정 기준(임직원 또는 매출액으로 예상)의 지역적 단위가 EU 회원국으로 넓어지므로, EU에서 활동하는 상당 규모의 국내 기업이 기업실사 의무화에 해당될 수 있음.
 - EU 의회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에 파리협정, EU 그린딜 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 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인권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유럽 진출 국내 기업의 지분관계별 매입 구조를 볼 때 관계회사가 66.8%를 차지하고, 지분관계가 없는 기타 회사가 33.2%를 차지함.
 - 실사 범위는 지분 또는 계약 등으로 직접 연계된 공급·협력 업체를 포함하므로,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관계 회사 및 직접계약 관계의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의무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구매기업에 의해 인권·환경 관리 및 관련 인증 획득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송지혜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 ◎ [배경]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를 개발협력 활동에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06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 선언 채택과 2009년 정책지침 공개에 이어 2021년 3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기후복원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지침을 공개함.
 - OECD DAC의 새로운 기후변화 지침은 과거 지침이 기후변화 적응에 집중하였던 데에 나아가 개발협력의 모든 활동에서 기후복원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 [지침의 주요 내용] 2021년 OECD DAC의 기후변화 지침은 개도국 정부와 ODA 공여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기후복원력 강화의 핵심 원칙·이행방안·요소와 그간의 선행사례를 종합하여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약, 샌다이 프레임워크, 새로운 도시의제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 수원국 주인의식 △ 포용적 접근 △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을 기후복원력 강화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함.
 - 기후복원력 강화 이행방안으로는 △ 거버넌스 제고 △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개선 △ 재정지원 △ 모니터링·평가·학습 개선을 제시하고 각 이행방안별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그간의 선행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함.
 - 개발협력 활동의 기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요소로는 △ 데이터·정보 △ 역량 강화 △ 기술이전이 제시되었음.
- ◎ [시사점] 우리나라는 범정부 ODA 정책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분야별·사업별 활동에서 기후변화·위험을 평가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협력 사업에서 기후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도구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방향성을 공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기후위험을 개발협력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부재함.
 - 최근 P4G, G7 등의 국제회의와 정상급 외교활동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약한바, 향후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복원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OECD DAC의 기후변화 지침에서 제시된 원칙과 이행방안,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정책 및 도구를 수립하고 사업과 접근방식의 다양화·고도화를 모색해야 함.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해왔으나,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됨.
-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는 크게 △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 소환 면담 △ 위법 행위 처벌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함.
 - 2021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 전자상거래 △ 지역 공동구매 △ 핀테크 등 분야의 관련 기업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8차례 이상의 기업 면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연이어 공개됨.
 - 특히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중국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
- ◎ 향후 규제 범위 확대·법 집행력 강화·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중 정부간 협력체제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치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간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Tel: 044-414-1064)

- ◎ [접종 현황]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접종률, 접종 속도, 확보물량은 국가별, 대륙별로 상이함.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EU 등 고소득 국가 위주로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는 반면, 아시아(중국 제외)와 아프리카의 접종률은 각각 8%, 2%로 아직 저조한 상황임.
 - 한국은 접종 개시는 다소 늦었으나 6월 이후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현재 약 30%의 접종률을 기록함.
-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유행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인 수행에 달려 있으며, 선부른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의 재확산을 야기할 수 있음.
 - 유럽 주요국은 백신 접종 개시 후 감염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봉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저지하였으며, 이후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는 추세임.
 - 반면 접종 진행과 함께 거리두기를 완화한 칠레, 바레인, 브라질, 페루, 인도 등에서는 변이 유행 등의 영향으로 감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같은 규모의 유행이더라도 치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 [접종률 제고 전략] 주요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접종자의 내부적인 동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방역조치 완화를 백신 접종의 혜택으로 제공할 경우 감염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스스로 안전해지고,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며,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내부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모든 계층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 [백신 보급 불균형 해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되어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통제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백신 보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역시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WHO, 코백스 AMC, G20, WTO 등의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함.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한하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hlhan@kiep.go.kr, Tel: 044-414-1126)

- ◎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 5. 21)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 북(北)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강온전략(△강: 제재 이행, 인권 개선, 한·미·일 공조 △온: 비핵화 개념에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제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준용)을 사용함.
- ◎ 北이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2021. 6. 17)하면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은 ‘대화과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려 들 것으로 예상됨.
 - 北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대화과 대결’ 양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미(美)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50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임.
 - 이후 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대변인의 “흥미로운 신호”라는 평가(2021. 6. 20), 北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반박(2021. 6. 22), 美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우리의 외교방침은 변화가 없다”는 대응(2021. 6. 23)이 이어지고 있음.
- ◎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여부는 北의 식량 상황에 좌우되는데, 北의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나 식량 상황은 인도적 위기(예: 다수의 아사자 발생)에 직면한 수준은 아니어서 2022년 상반기까지 현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美의 비핵화 방안이 추상적이어서 北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결정되는 2021년 7월을 전후하여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남북 연락 채널 복원]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와 남북 협력 재개를 위해 연락 채널 복원이 시급함.
 - [비핵화 방안] 하노이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던 1단계 비핵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북미 측에 제안할 수 있음.
 - [백신 협력]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北에 지원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음.
 - [남북 공동지원단]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2월)에 남북 공동지원단을 파견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 ◎ 금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제1장),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제2장),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제3장)으로 구성됨.
- ◎ [코로나19 대책]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제공체제의 광역적 대응 미숙’을 인정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병상을 융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5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중 4개사가 임상시험 중이나 연내 공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에 대해,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 [신성장동력] 4개 신성장동력으로 ① 그린성장 ② 디지털화 ③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④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을 제시함.
 - [그린성장] 그린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이노베이션 촉진, 탈탄소화에 중점을 둔 에너지·자원정책,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도입을 강조함.
 - [디지털화] 향후 5년간에 걸쳐 정부와 민간부문에 디지털기반을 확립하고,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확대, 각종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통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조함.
 -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소득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조기에 전국평균 시급 1,000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 최근 중고생 자살 증가, 아동학대, 집단괴롭힘 문제에 주목하면서, 아동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 출산·육아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 [재정건전화] 지난 2018년 6월 당시 아베 내각이 설정한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제시함.
 - 일본정부조차도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노정함.
- ◎ [시사점] 일본정부가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그린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참고할 만함.
 - 특히 그린성장전략은 우리 정부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수소, 차세대 재생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ICT 등과 겹치고 있어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오는 9월 출범예정인 디지털청의 행정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과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은 일본 행정 디지털화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판단됨.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전략과 한국과의 신협력 과제

정동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dyjeong@kiep.go.kr, 044-414-1167)

◎ 아제르바이잔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자원의존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석유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국가발전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산업 및 수출 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6년 장기발전전략을 담은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비석유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별 정책을 제시하면서 공산품·식품 등 상품과 관광·운송 서비스를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육성 분야로 강조함.
- 최근 비석유부문 생산이 석유가스부문을 상회하면서 생산구조에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광업(석유·가스) 감소분을 서비스업이 대체하면서 비석유부문 산업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 측면에서는 에너지자원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중심 수출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업 산업생산이 증가하면서 식품가공 산업이 발전하고 제조 상품군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과 과일·채소·귀금속·면 등 비석유상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다각화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향후 10년간의 경제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아제르바이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비석유부문 및 제조업 발전,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함.

-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략적 단계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정의의 기반을 하는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본 △회복한 영토로의 귀환 △깨끗한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5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함.
-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다각화 심화,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발굴 차원에서 비석유부문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당면한 현안과제 및 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과 농업 및 제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협력 사업 내실화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22년 수교 30주년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이 저조하고 아제르바이잔이 한국의 제3기 ODA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면서 개발협력 규모 축소 및 사업내용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지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녹색성장 부문에서 국제공조를 확대 하고 기후위기 극복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제르바이잔이 수출가능성이 높은 농업 및 제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고, 한국도 신북방정책에서 농업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분야 협력 추진이 필요함.
- 양국의 협력수요가 높은 농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기술 및 인적 교류, 지식공유 등을 통해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정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한편, 1.5트랙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가 요구됨.

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이승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eungholee@kiep.go.kr, Tel: 044-414-1211)

- ◎ 2021년 6월 6일 실시된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Perú Libre)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대선 결선투표는 이념 성향, 정치 경험, 출신 등에서 양극단에 있는 카스티요 후보와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음.
 -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20개 정당 중 10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자유페루당이 전체 130석 중 37석을, 후지모리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은 24석을 차지함.
 - 이번 대선 및 총선은 지난 40여 개월간 대통령이 3번 교체되고 행정부·입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정치 불안이 가중되어온 가운데 실시됨.
- ◎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빈곤 및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와 기성 정치세력 및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여실히 드러남.
 - 대선 결선투표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빈곤 및 소득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카스티요 후보에게 유권자의 지지가 쏠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이은 부패 스캔들과 잇따른 대통령 교체로 인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피로감이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카스티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선 1차 투표에서 상위 후보자들이 기록한 저조한 득표율과 총선에서 상위 정당들이 획득한 적은 의석 수는 정당정치를 매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드러냄.
- ◎ 카스티요 신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되며, 최근 중남미에서 연이어 좌파정권이 탄생하며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이른바 혼합경제(economía mixta) 모델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전략산업]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광업 및 에너지 등 전략산업 국유화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카스티요 후보의 소속 정당이 확보한 적은 의석수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됨.
 - [보건] 코로나19 전담 대응본부 신설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엄단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의료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원활한 국정운영과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원내 진입 정당들이 극도로 양극화·파편화되어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외교] 중남미 주요국 중 좌파정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